

다보스 2023: 글로벌 무역과 투자 회복을 위한 과제

김종덕 무역통상실장 (jongduk.kim@kiep.go.kr, Tel: 044-414-1181)

이규엽 무역통상실 신통상전략팀장 (kylee@kiep.go.kr, Tel: 044-414-1233)

구경현 무역통상실 무역투자정책팀장 (khkoo@kiep.go.kr, Tel: 044-414-1271)

이천기 무역통상실 무역협정팀장 (leeck@kiep.go.kr, Tel: 044-414-1361)

김현수 무역통상실 신통상전략팀 부연구위원 (kimhs@kiep.go.kr, Tel: 044-414-1087)

이주관 무역통상실 신통상전략팀 부연구위원 (jklee@kiep.go.kr, Tel: 044-414-1089)

차 례

1. 다보스 2023: 분절화된 세계에서의 협력
2. 세계경제의 도전과제: 글로벌 무역과 투자의 부진
3. 무역과 투자 둔화의 구조적인 원인과 세계화의 명암 재고찰
4. 무역자유화와 한국
5. 정책 시사점

주요 내용

- ▶ 다보스 2023은 '분절화된 세계에서의 협력(Cooperation in a Fragmented World)'을 주제로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가는 방안에 대해 화두를 던짐.
 - 2023년 세계 무역성장률을 3.4%에서 1.0%로 하향 조정(WTO)하였고, 2022년 2/4분기 세계 해외직접투자 실적은 전기대비 3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2023년 1월 수정된 전망치를 제시한 세계은행은 2023년 전망을 지난해 말 발표한 3.0%에서 1.7%로 하향 조정함.
 - 다보스 2023 세계경제 포럼은 세계 무역과 경제에 관한 우울한 전망하에서 포용과 지속 성장을 위한 무역 및 투자의 내러티브(narrative)를 재조명하고, 저성장세가 장기화되고 있는 세계 무역과 투자를 회복하기 위한 국제적 정책 공조를 강조함.
- ▶ 현재 무역과 해외투자 증가세 둔화의 이면에는 세계경제의 구조적·정치적 갈등관계가 복합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바, 국가간 신뢰회복과 협력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음.
 - 코로나19 위기 이후에 나타난 세계경제의 위축과 이에 대응하는 각국의 중상주의적 보호무역 기조의 심화 등이 무역과 투자 감소의 원인으로 지목됨.
 - 아울러 현재 무역과 투자의 저성장 기조 장기화의 이면에는 신흥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따른 국가간 경쟁의 심화, GVC 성장세 둔화에 따른 교역재 수요 감소, 불평등 확대가 촉발한 세계화에 대한 불만을 각국 정부가 보호주의적 통상정책으로 표출한 결과로 이해
 - 경기하락으로 인한 세계수요 감소, 보호주의적 정책 증가, 수출 및 투자 감소, 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가간 신뢰회복과 협력이 중요한 시기임.
- ▶ 국제사회에서 무역과 투자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개방이 가져다주는 혜택에 대한 새로운 근거를 제시하고, 갈등요인에 대해 협력과 논의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무역과 투자가 부진한 원인을 다각적인 차원에서 재조명하고, 불평등과 같이 이미 알려진 이슈를 다차원의 의제로 삼아 공동의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보호주의적 산업정책 및 보조금 문제와 함께 새로운 갈등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는 비무역가치(기후변화, 국가안보 등)와 관련하여 일방조치에 대한 다차원의 끈기 있는 논의와 협력이 필요함.
- ▶ 세계적인 무역과 투자의 재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제적 위상에 걸맞은 통상정책의 협력 범위 확대와 무역자유화에 따른 국내 보완대책의 지속적인 정비 등은 한국이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할 정책 과제임.
 - 지속발전 가능성, 포용성 등 현재 국제사회의 고민과 이슈에 대해 우리 입장을 담은 적극적인 제안이 필요함.
 - 디지털, 환경, 노동 등 신통상 이슈와 관련된 통상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기술, 인프라, 인력 교류 등 교역상대국의 정책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력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공급망·디지털·기후변화에 맞춘 ODA 사업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며, 무역과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의 효과를 높인다는 차원에서 통상정책과 ODA 정책 간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1. 다보스 2023: 분절화된 세계에서의 협력

- 2023년 다보스 세계경제 포럼(2023.1.16~1.20)은 '분절화된 세계에서의 협력(Cooperation in a Fragmented World)'을 주제로 각국의 전문가, 정책입안자들과 함께 현재 세계경제가 처한 어려움을 함께 논의하고,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가는 방안을 고민함.
- 세계 무역과 경제에 관한 우울한 전망하에서 포용과 지속 성장을 위한 무역과 투자의 내러티브(narrative)를 재조명하고, 세계 무역과 투자를 회복하기 위한 국제적인 정책 공조방안을 논의함.
 -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보호무역주의 조치가 증가하고 코로나19 이후 부의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는 상황에서 무역과 투자에 대한 국가간 협력 안전이 새롭게 부상하고 기존 시스템을 성찰하는 논의가 확대됨.
- 본고에서는 다보스 2023 세계경제 포럼을 계기로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와 함께 촉발된 세계적인 무역과 (해외)투자의 저성장 문제 현황을 살펴보고,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와 우리의 정책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2. 세계경제의 도전과제: 글로벌 무역과 투자의 부진

- 2023년 세계무역과 경제성장률이 2022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세계적인 성장동력 상실에 대한 우려가 증폭됨.
 - 2023년 세계 무역성장률을 3.4%에서 1.0%로 하향 조정(WTO)¹⁾하였으며, 2022년 2/4분기 세계 해외직접 투자 실적이 전기대비 31% 감소한 것으로 집계(UNCTAD)됨.
 - 해외 수요의 지표가 되는 세계 경제성장률의 경우 KIEP는 2022년 말 기준 2023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2022년보다 0.7%p 낮은 2.4%(PPP 환율 기준)로 하향 조정²⁾한 바 있으며, 2023년 1월 11일 수정된 전망치를 제시한 세계은행은 올해 전망을 2022년 말 발표한 3%에서 1.7%로 하향 조정³⁾
 - 현재의 암울한 경제전망은 상당부분 코로나19로 촉발된 공급망 위기, 이에 따른 각국 정부의 재정 확대 이후 긴축 노력, 급속한 인플레이션 상승 억제를 위한 경직적인 통화정책 운용 등이 주요 요인임.
 - 다만 경기적인 요인 이외에도 장기의 구조적인 원인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국제사회가 함께 고민하며 대책 및 협력방안도 함께 마련해나아가야 할 것임.
- 1980년대 중반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의 확장과 함께 폭발적인 성장세를 유지하던 세계 무역 및 투자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한국도 유사한 방향의 변화를 겪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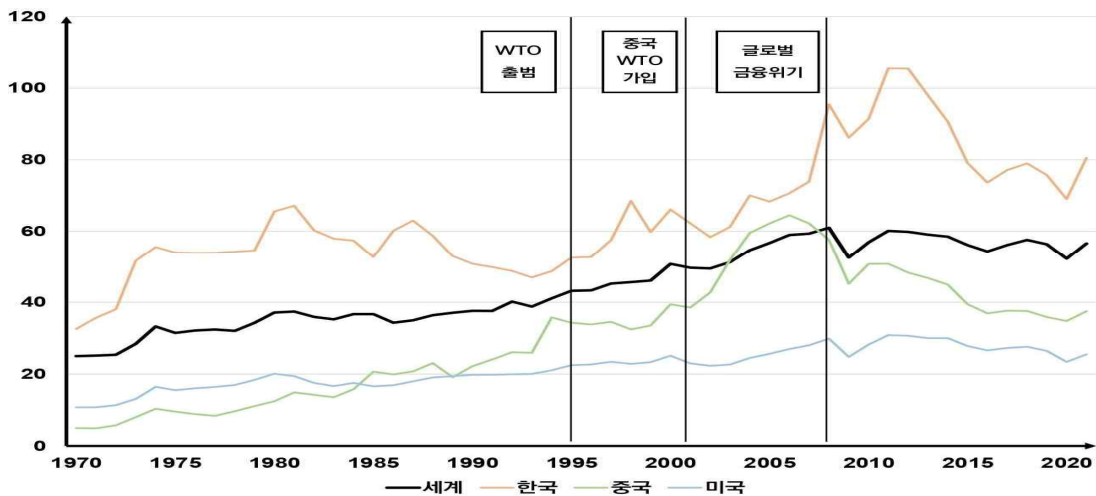
1) https://www.wto.org/english/news_e/pres22_e/pr909_e.htm.

2) 안성배 외(2022), 「2023년 세계경제 전망」,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 22, No. 6.

3) OECD(2022.11)는 2.2%, IMF(2023.1.31)는 2.9%로, 3% 이하의 전망이 대부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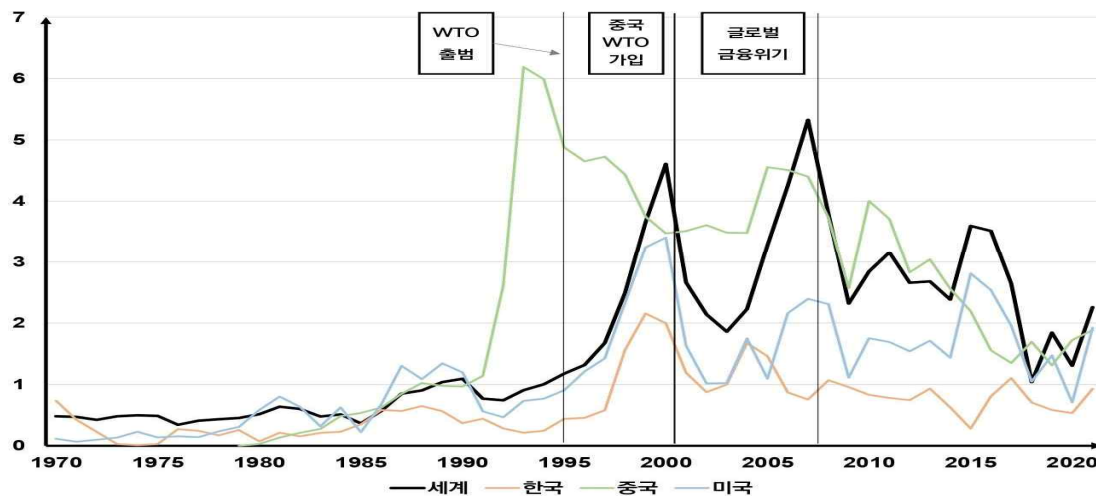
- 1980년대 중반 이후 세계화 및 무역자유화의 바람을 타고 지난 30여 년간 무역과 투자가 확대됨.
- 반면 글로벌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 코로나19 상황을 지나면서 최근 약 10여 년간 무역과 투자의 성장세가 꺾였는데, 세계 무역성장률(연평균)은 1995~2008년 사이 약 9%에 이르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간(2009~19년) 약 4%로 하락하였으며, 전 세계 무역개방도(무역액(수출+수입)과 GDP 간의 비율)는 2008년 61로 최고치를 달성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2021년 57까지 하락함.
-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형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세계 해외(직접)투자 성장률(연평균)의 경우도 1995~2008년 기간 약 20.7%에 이르렀으나, 2009~19년에는 2.9%로 큰 폭으로 하락함.
- 한국의 무역개방도는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무역개방도 역시 세계 경제와 유사한 흐름을 보였는데, 2011년을 정점(106)으로 2021년 80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최고치 대비 23.8% 하락

그림 1. 세계 무역액 비중(GDP 대비)



자료: World Bank Database.

그림 2. 세계 해외직접투자액 비중(GDP 대비)



자료: World Bank Database.

3. 무역과 투자 침체의 구조적 원인과 세계화의 명암 재고찰

가. 무역과 투자 침체의 구조적 원인

■ 현재 무역과 투자의 저성장에는 코로나19 이후 나타난 경기적인 요인과 함께 장기의 구조적 요인이 함께 작동하고 있으며, 주로 신흥시장의 부상에 따른 국가간 경쟁 심화, GVC 성장세 둔화에 따른 교역재 수요 감소, 경기하락으로 인한 자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확산 등이 구조적 원인으로 지목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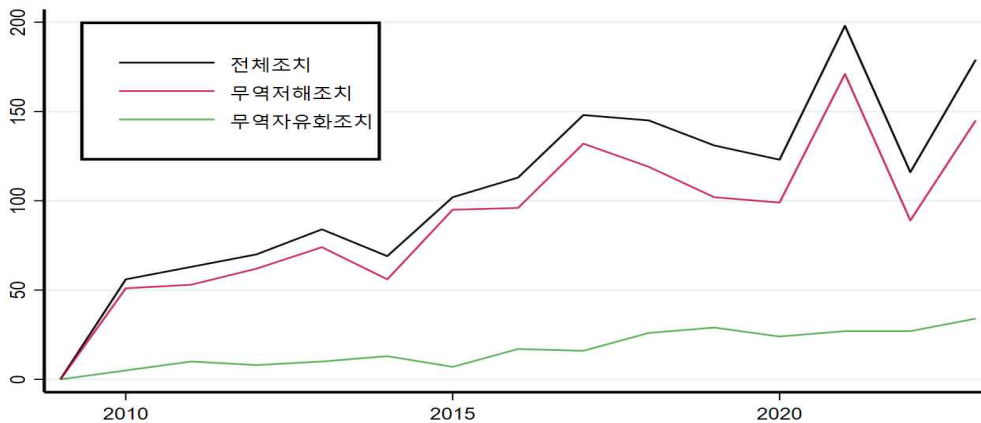
- 기술 측면에서 운송물류 및 정보통신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하였고, 정치적으로는 냉전 이후 화해무드가 조성되면서 유럽의 경제통합과 EU의 탄생, WTO 다자통상체제 출범이 이루어졌으며, 아시아 개도국의 빠른 경제성장, 중국의 세계경제로의 편입과 WTO 가입으로 신흥 개도국을 활용한 다국적 기업 생산 네트워크의 범 세계화가 일어나면서 1980년대 중반 이후 약 30여 년간 무역과 투자가 크게 확대됨(Hoekman 2015).
- 하지만 2000년대를 넘어서면서 신흥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따른 국가간 경쟁 심화, GVC 성장 둔화에 따른 개도국의 중간재 교역 증가세 감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비·투자·무역 감소의 악순환, 다자통상 체제 논의의 진전 실패, 자국 중심의 통상정책 기조 확산(조문희 외 2020) 등으로 전 세계 무역과 투자의 저성장세가 장기화되고 있음.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무역증가율 하락의 상당 부분은 부진한 경기회복과 투자 감소로 설명되지만, 4) 경기적 요인 외에 국제무역 내 생산 네트워크 성장의 둔화가 주요한 구조적 요인으로 지적(Constantinescu et al. 2020).
 - 신흥 개도국의 빠른 경제성장과 기술발전으로 중간재 자급률이 상승하면서 교역재 수요 감소가 나타나기도 함(Escaith and Miroudot 2015).
 - ※ 대표적으로, 중국의 산업고도화 정책 ⇒ R&D(% of GDP) 0.89%('00년), 2.14%('19년) 기술 투자 확대 ⇒ 자급률 향상 ⇒ 교역재 수요 감소
 - 글로벌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 최근의 코로나19 위기로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자국산업을 보호하고 수출실적을 높이기 위한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조치가 증가하는 추세(무역저해 조치 ≫ 무역자유화 조치, [그림 3] 참고).
- 무역자유화와 디지털 기술(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GVC 참여도를 높이는 힘으로 작용하는 반면, 최근 보호무역주의 기조의 확산은 GVC 성장세 둔화에 기여함(Antras and Chor 2022 외 다수).
- 무역의 확대가 불평등(소득, 자산 등), 환경오염, 불공정 무역, 안보 등의 논란과 맞물리면서 세계화에 대한 불만을 확대시켰으며, 개별 국가의 세계화 및 개방화 정책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게 됨.

■ 경제위기에 따른 고용과 임금에 대한 불안감 고조는 포퓰리즘 확산으로 이어지고, 개도국뿐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경제·사회·정치 현안으로 부상하였으며, 경기침체기 다수의 국가에서 무역과 투자 제한조치가 증가하는데 기여

4) Aslam et al.(2017)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무역증가율 하락('03~'07년 8.9% → '12~'15년 2.3%)의 60~80%가 수요부진과 투자 감소에 따른 것으로 설명함.

- 경기불황 시 선진국조차도 반덤핑 절차, 보건·안전 기준 등 비관세장벽을 수입제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다양한 조치를 수반한 보호주의 성격의 일방적 통상정책을 적극적으로 펼.
- 코로나19, 공급망 안정성, 미·중 패권경쟁, 러·우 전쟁, 인플레이션 등에 따라 가치와 안보를 명분으로 국가·지역 간 갈등관계가 첨예화되면서 무역과 개방의 이익을 옹호해왔던 기존 논리가 퇴색되는 경향을 보임.
- 국제무역의 관점에서 국가(nation-state)의 한계와 궁극적 역할에 관한 담론이 제기됨(Rodrik 2018).

그림 3. 무역자유화 조치와 무역저해조치 건수



주: 무역저해(Harmful) 조치와 무역자유화(Liberalising) 조치 건수는 각각 2008년 11월 이후부터 집계됨.
자료: Global Trade Alert.

■ GVC 확대와 중첩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는 생산의 효율성을 높여 무역의 이익을 확대하지만, 역설적으로 생산네트워크의 교란이나 자유화에 역행하는 정책의 파급효과를 키우는 방향으로도 작용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함.

- 기존의 양자간 완성품 중심 국제 무역모형에 산업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구조를 반영하여 분석하면 무역으로 인한 각국의 경제적 이익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Antras and Chor 2022; Caliendo and Parro 2015 외 다수)
- 반면 무역자유화 후퇴의 부정적 효과 역시 커지는데, 2018~19년 미·중 무역전쟁에 따라 미국의 수출은 감소하고 제조업 고용도 악화되었으며, 미국 및 중국과 무역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도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발생함(Fajelbaum *et al.* 2020; Handley *et al.* 2019; Caliendo *et al.* 2019, 2022).

나. 세계화의 명과 암: 개방의 사회적 비용 재고찰

■ 무역과 투자 확대가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역할은 한 것은 사실이나, 개방화 추진 과정에서 긍정적 영향을 위주로 논의가 단순화되면서 사회적 비용 발생 등에 대해 정책적으로 균형 잡힌 관점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존재함.

- 무역은 경제 전반의 생산과 고용 확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특히 개도국을 중심으로 경제성장의 기반을 제공하였으며, GVC의 발달은 개발도상국이 일정한 경제 발전 수준에 이르기 전에 특화된 생산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음(Frankel and Romer 1999; Baldwin 2011).

- 무역과 해외투자는 선도적인 아이디어가 전파되는 중요한 경로가 되어 아이디어를 융합하는 국가의 생산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며,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의 스피로버 효과도 발생함(Melitz and Trefler 2012; Donaldson 2015; Alvarez *et al.* 2013; Buera and Oberfield 2020).
- 무역자유화 관련 많은 이론과 실증 연구물에서 무역과 개방의 이익이 평균적으로 비용을 능가하며, 무역이 개도국의 빈곤 퇴치에 도움을 준다는 근거를 제시하였음.
 - 무역개방도와 빈곤(poverty)이 부(-)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실증연구가 다수 존재하며(Panagariya 2019), 세계은행 집계 기준으로 전 세계 빈곤층이 1995년 32.8%에서 2019년 8.4%로 감소하는 데 기여함.
- 아울러 무역을 통한 경제적 이해관계의 공유는 국가간 갈등 억제에 기여한다는 증거들도 제시되어옴(Martin *et al.* 2008; Hegre and Oneal 2010; Li and Reuveny 2011).⁵⁾
- 다만 무역자유화는 경제 전체에 복잡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개별 경제주체에 따라 이질적인 영향을 주게 되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책 추진 시 무역이 주는 긍정적 혜택만 주로 부각되고 홍보되는 측면이 있음.

■ 2000년대를 넘어서면서 세계적으로 국가간(inter-country) 불평등은 감소했으나 국가 내(within-country) 불평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성장과 효율 중심의 신자유주의적 세계관과 세계화에 던지는 우려가 확산됨.

- 국가간 비교시: 상위 10%의 소득은 하위 50%의 10.5배(1920년) → 21.8배(1980년) → 8.7배(2020년)
- 국가 내 비교시: 상위 10%의 소득은 하위 50%의 14.4배(1920년) → 8.6배(1980년) → 15.1배(2020년)
 - 국가 주도 개발전략과 적극적 개방정책을 펼친 신흥국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국가간 소득격차는 감소한 반면, 공산권 국가의 몰락과 서구권의 다수 국가에서 보수정당의 집권에 따른 정책 변화, 개방의 확대와 국제 분업의 고도화에 따른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로 국가 내 소득격차는 심화
- 소득 불평등 확대의 주요 원인에 대해 논란은 다양하나 현재는 국가 내 불평등 심화의 주요인으로 '실제로 무역을 지목할 수 있는지 여부'⁶⁾보다, 국가 내 불평등이 이미 '무역자유화의 부작용'으로서 인식되고 주요국의 정책 의사결정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으로 보임.
 - 1980년 대비 2020년 지니계수⁷⁾가 증가한 대표적인 국가는 미국, 일본, 이탈리아, 호주, 영국, 중국, 러시아, 인도 등으로, 이들 국가의 불평등도 변화를 무역개방도의 변화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움(그림 4).
- 전 세계 실질임금 상위 30~70% 그룹은 1980년 이후 실질임금 누적증가율이 150% 이상을 기록하며, 선진국을 빠르게 추격해온 신흥국의 성장세를 대변함.
- 전 세계 실질임금 상위 1% 그룹의 실질임금은 150% 이상 증가했으나 70~90% 그룹(선진국의 중산층 이하 계층 다수 포함)의 실질임금은 상위 1% 그룹만큼 증가하지 못하여 두 그룹 간 실질임금의 격차는 벌어짐.
- 무역과 투자 자유화가 주는 경제 전반의 혜택에도 불구하고 개방은 국가 내 산업구조 변화를 초래하며, 이 과정에서 불균등한 사회적 조정비용이 발생하고 혜택에서 소외된 계층의 불만이 누적되면서 성장과 효율 중심의 신자유주의적 세계관에 대한 우려가 확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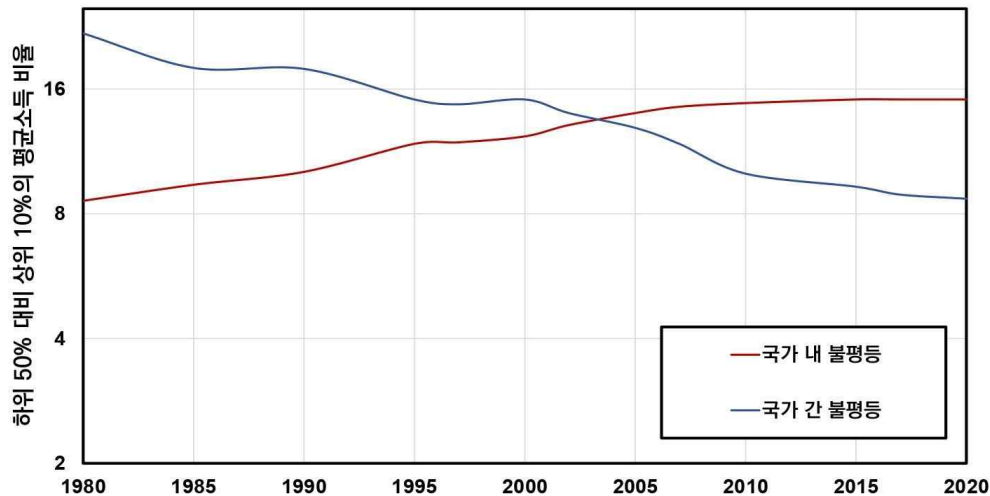
5) 다만 분쟁(전쟁)과 무역은 상호 영향을 주며, 지역·교역품목·양자/다자 관계 등 다양한 조건의 영향을 받음.

6) 소득 불평등의 원인은 다양하나, 기술진보와 개방(무역, 금융)이 대표적으로 언급됨.

7) 소득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소득분배지표로, 지니계수는 0에서 1 사이의 수치로 표시되는데 소득분배가 완전평등한 경우가 0, 완전불평등한 경우가 1임.

- 개방에 따른 사회·경제적 조정과정에서 혜택에 소외·배제된 그룹에게는 무역자유화의 혜택이 없거나, 있더라도 국가간 비대칭적으로 분배되고, 해외투자도 선진국에 집중되어 개도국의 혜택이 작으며, 세계화로 소득 불평등, 국가 내 빈곤, 환경파괴, 문화 획일화 등 문제가 심화된다고 주장
 - 무역자유화(관세감축)에 따른 소득과 불평등의 상충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연구: 개발도상국 54개국 중 45개국은 무역자유화에 따라 가계소득과 불평등 비용이 동시 증가한 반면, 9개국은 가계소득과 불평등 비용이 동시 감소(Artuc *et al.* 2019)
- 무역자유화 확대는 개인·사회 조정비용을 발생시키는바, 임금 감소와 실업 증가를 유발한다는 다수의 연구결과를 근거로(Autor *et al.* 2013, 2016; Heid and Larch 2016; Helpman and Itshoki 2010; Davidson and Matusz 1999), 디지털·그린 전환정책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와 국가간 기술 격차의 확대는 각국 내 근로자의 고용과 임금의 안정성을 낮출 수 있다는 우려가 증폭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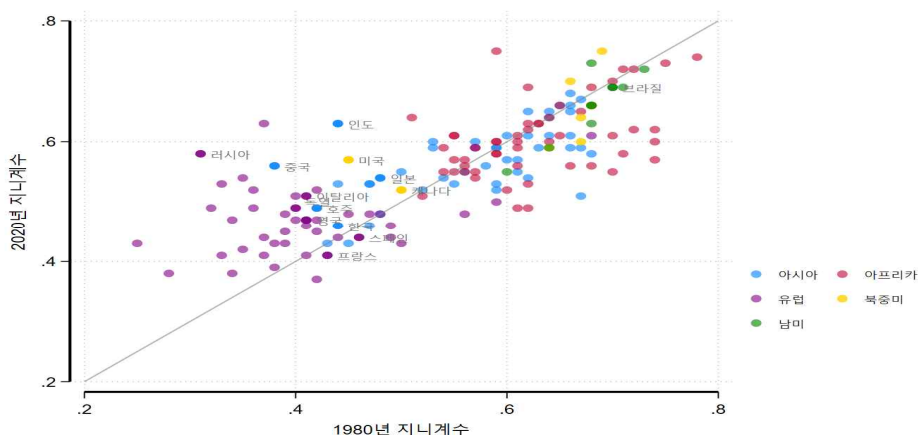
그림 4. 국가간 불평등 vs. 국가 내 불평등: 소득 하위 50% 대비 상위 10% 비율(T10/B50)



주: 1) 국가간 T10/B50 비율은 각 국가 내 모든 사람이 동일한 소득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 상태로 계산한 값임.
2) 국가 내 T10/B50 비율은 모든 국가가 동일한 소득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 상태로 계산한 값임.

자료: World Inequality Database.

그림 5. 국가 내 불평등: 전 세계 국가별 지니계수의 변화(1980 vs. 2020)



주: 전 세계 국가를 아시아, 유럽, 남미, 아프리카, 북중미로 구분하고, 가로축을 1980년 지니계수로 세로축을 2020년 지니계수로 설정한 후, 각국의 1980년과 2020년 지니계수를 한 평면에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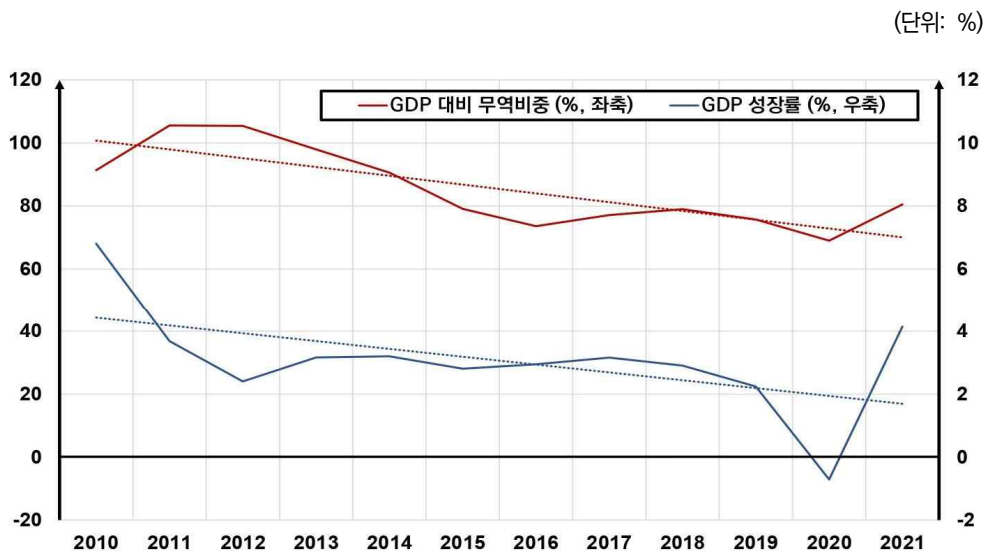
자료: World Inequality Database.

4. 무역자유화와 한국

■ 무역은 지속적으로 한국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 중 하나로 역할을 해왔으며, 상대적으로 높은 무역 개방도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니계수로 측정된 한국 내 불평등 정도는 비교적 큰 변화 없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해온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의 대세계 수출은 2001년 1,504억 달러에서 2021년 6,444억 달러로 연평균 7.5% 증가하였으며, 대세계 수입 또한 같은 기간 1,411억 달러에서 6,151억 달러로 연평균 7.6% 증가하여 수출과 수입 모두 같은 기간 세계 연평균 증가율(각각 6.6%, 6.4%)을 상회함.
- 한국의 GDP 대비 무역 비중은 독일, 일본 등 여타 주요 수출국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으로, 한국의 무역증가율과 실질GDP 성장률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임.
- 다만 2010년대 이후 무역성장률이 하락하고 GDP 대비 무역의 비중이 감소하면서 GDP 성장률은 전반적으로 하향 추세를 보임(그림 6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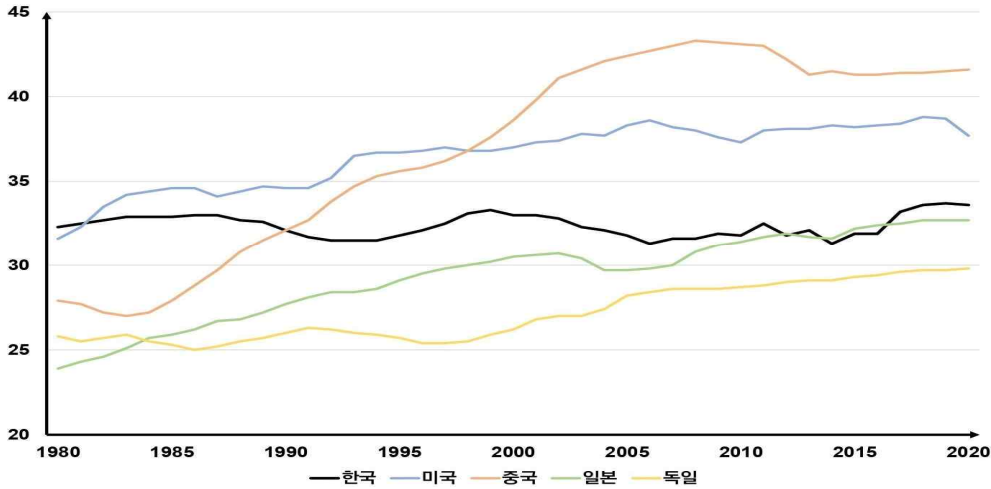
그림 6. 한국의 연도별 GDP 대비 무역 비중의 변화와 실질GDP 성장률 간의 관계



자료: World Bank.

- 소득 불평등의 척도인 지니계수는 한국의 경우 30~35 사이에 놓이며, 2020년 기준 독일보다는 높지만 일본과 유사하며 미국과 중국보다는 낮은 수준임(그림 7 참고).
- 한국의 경우 빠른 경제성장으로 경제 전반의 소득수준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균등한 소득분배가 극심한 형태로 발현되지 않았음.
- 한국은 개방을 추진하면서 지속적인 보완대책을 병행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소득 불평등도의 변화가 크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반 국민의 무역자유화에 대한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이는 후속 시장 자유화 논의를 이어나갈 수 있었던 바탕이 된 것으로 보임.

그림 7. 국가 내 불평등: 주요국 지니계수의 변화(1980~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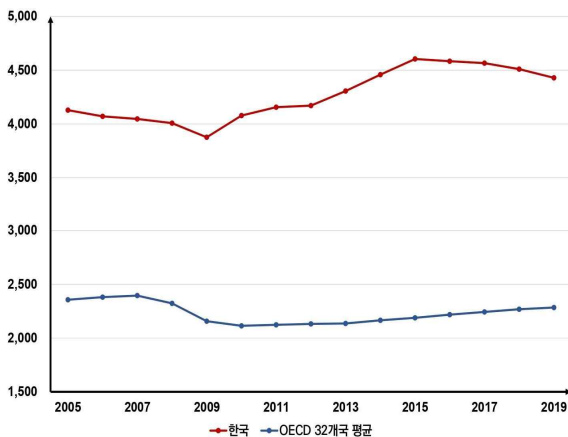
자료: World Inequality Database

■ 2000년대 이후 FTA를 통해 지속적으로 무역자유화를 추진해온 한국은 제조업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 제조업 고용과 실질임금도 꾸준히 상승하였음.

- 한국 제조업 종사자 수는 2005년 413만 명에서 2019년 443만 명으로 연평균 0.5% 증가하였으며, 시간당 실질임금도 2001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2.8% 증가하였음.
 - 같은 기간 OECD 국가의 평균 제조업 종사자 수가 오히려 감소하고 평균 시간당 실질임금도 연평균 0.6% 증가에 그친 것과 대비됨.
- 적극적인 FTA 정책, 중국과 베트남의 빠른 경제성장 등에 따라 한국의 수출 규모는 지속 확대되었으며, 이는 한국 제조업 고용수준 및 실질임금을 높이는 주요 요인이었음.

그림 8. 제조업 종사자수 변화

(단위: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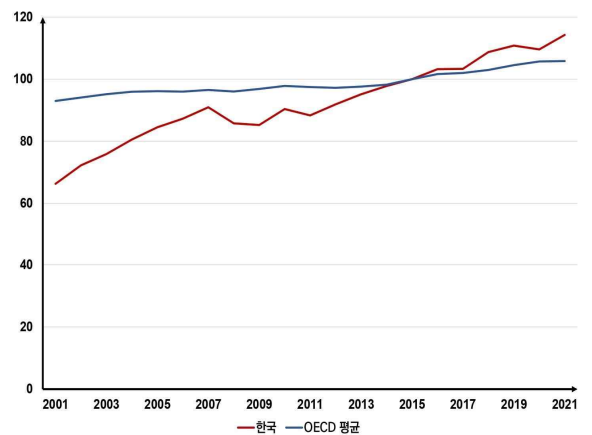


주: 한국을 제외한 OECD 37개 회원국 중에서 가용 자료의 한계로 튀르키예,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5개국을 비교군에서 제외하였음.

자료: OECD 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9. 제조업 시간당 실질임금 인덱스 변화

(2015년=100)



주: OECD 평균 제조업 실질임금 자료는 개별 국가가 아닌 'OECD'로 분류되어 제공된 자료를 이용하였음. 따라서 한국을 포함한 모든 OECD 국가의 평균 제조업 실질임금을 의미함.

자료: OECD 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한국 종사자 10인 이상의 제조기업 중 2003~18년 동안 FTA로 인해 수출이 10%p 증가한 산업의 기업은 고용이 평균 1.5명 더 증가했으며, 종사자 일인당 연간실질급여액도 더 높아짐.⁸⁾
- 역시 2003~18년 기간에 대중국·대베트남 수출증가노출도가 10%p 증가한 산업에서는 평균적으로 연간 고용증가율이 4%p 더 상승하였으며, 해당 산업 근로자의 장기(10년) 근로소득 증가율 또한 유의미하게 높아짐.⁹⁾

■ 다만 개방 확대는 수입경쟁 산업의 고용 및 실질임금 증가율을 수출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시킴으로써 기업간, 그리고 근로자간 소득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였음.

- 2003~18년 FTA로 인한 수입경쟁 심화가 고용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시켰다는 증거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FTA로 인한 수입증가율이 10%p 높아진 산업의 종사자 10인 이상 제조기업의 경우 종사자 일인당 연간 실질급여액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¹⁰⁾
- 같은 기간 대중국·대베트남 수입경쟁노출도가 10%p 증가한 산업에서는 평균적으로 고용증가율이 3.9%p 감소하였으며, 장기(10년) 근로소득 증가율을 감소시키고 비자발적 실직률을 증가시킴.¹¹⁾
- 한국이 불평등 문제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므로, 무역과 직접 관련하여서는 제조업 수출 대기업과 내수 서비스 중소기업 간 이중경제(dualistic economy)의 문제, 더 나아가 세대 계층간 이동성 악화, 낮은 여성 임금 및 노인 빈곤층의 취약성 등 개방의 확대에 따라 사회 경제적으로 빠른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간접적인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임(OECD 2020; WTO 2021).

4. 정책 시사점

가. 국제사회에 대한 시사점

- 무역에 대한 신뢰 회복 및 무역과 투자 확대를 위한 글로벌 컨센서스 구축을 위해 개방의 경제·사회·정치적 영향에 관한 연구와 풍부하고 다양한 각국의 사례 분석이 지속되어야 함.
 - 무역과 투자의 확대는 국가간 정치·경제·사회·문화 측면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인류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문제에 대한 국가간 협력 기반을 제공하므로, 중장기적으로 인권, 평화 등 인류 보편적 가치 확보에 기여한다는 인식의 개선이 필요함.
 - 안보나 가치에 관한 국가의 이질적 차이를 좁히고, 국가간 갈등 국면을 완화하기 위한 통상 차원의 협력 이슈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 무역과 개방이 빈곤 증가, 고용과 임금 안정성, 소득 불평등, 양극화, 환경, 공급망, 안보 등과 어떻게 연계되는지 미시적이고 체계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음.

8) 구경현 외(2021), pp. 53~54 참고

9) 구경현 외(2020), 제3장과 제4장 참고

10) 구경현 외(2021), pp. 53~54. 참고

11) 구경현 외(2020), 제3장과 제4장 참고

- 일례로 방글라데시 의류봉제(ready-made garment) 산업의 수출은 전체 수출의 약 75%를 차지하며, 해당 산업의 성장으로 사업장 인근에 거주하는 여성의 고용 참여도와 교육 수준이 높아졌으며(Heath and Mobarak 2015), 동 산업의 수출 증가에 따라 해당 산업 소득의 증가와 함께 (전 산업) 남녀간 임금 격차가 완화됨(Robertson *et al.* 2022).
 - 실증과 사례 분석을 담은 양질의 보고서를 생산하기 위해 국가간 연구기관의 교류와 공동 연구 확대가 필요함.
- 협상과 함께 다양한 사회·경제적 맥락에서 국가간 협력을 통해 상품뿐 아니라 서비스, 디지털, 환경 등 분야의 불필요한 무역 비용을 낮춤으로써 궁극적으로 새로운 글로벌 가치사슬 형성을 활성화하고 무역, 투자, 소득(수요)이 함께 증가하는 글로벌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함.
- 각국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그린 전환 중심정책 수요를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국가간 경제협력을 보완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디지털·그린 전환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가 기업의 비즈니스와 고용 구조의 변혁을 초래하므로 관련 통계 구축이 시급하며, 구축한 통계와 실증사례는 정책 결정의 효과를 높일 것으로 예상
 - [디지털] 무역과 투자 확대는 디지털 연결성을 강화하고, 디지털 전환 촉진에 따른 개발정책의 효과성을 높여 디지털 격차 완화로 경제·사회적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포용과 지속가능 무역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역량강화와 기술지원에 관한 선진국의 역할(TTC 아프리카 투자사례): 지상과 해저 포함 인터넷 인프라, 5G, AI,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 등 분야에 관심이 높은 국가에 대한 개발지원, 투자환경 개선
 - 디지털 연결성에 따른 데이터 이동 증가는 국가간 개방성을 높이고(Riker 2014), 국가간 상품 교역(Osnago and Tan 2016)과 서비스 교역(Kneller and Timmis 2016)을 증진하며, 소비자 후생을 제고(Dolfen *et al.* 2023).
 - [기후·환경] 무역과 투자 확대는 그린 전환을 통한 저탄소 경제 실현에 기여하고, 개선된 기후와 환경은 개인의 건강과 삶의 질에도 긴밀하게 연결되며, 인류가 공동으로 직면한 기후·환경의 위기 극복에도 기여함.
 - 무역·투자의 확대는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도국의 적응력 향상에 기여
 - ※ 투자의 확대로 선진 기후적응 기술과 인프라가 도입되면 식량안보가 개선되고, 자연재해의 대응력이 확대되며, 피해 복구에 필요한 자원의 접근성도 강화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통한 적응력(adaptation)이 개선됨(WTO 2022; Irwin 2019).
 - 기후변화 완화(mitigation) 목적의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무역과 투자의 핵심 역할은 단기에 집중되는 투자금, 조정비용과 관련성이 높음.
 - ※ 일부 선진국만 보유한 온실가스 감축 관련 선진기술의 국제적 확산은 기후기술·상품·지식자산을 포함한 무역과 투자를 통해 실현되며, 녹색 전환에 기여(Garsous and Worack 2021; Chakraborty and Mazzanti 2020)
 - ※ 지리적으로 불균등하게 분포한 재생에너지와 전력은 무역과 투자를 통해 효율적으로 재분배되며, 환경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낮춰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Wang *et al.* 2021)

- 무역의 확대에 따른 불평등 문제를 통상 차원의 의제로 삼고 공동의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비무역가치(NTCs; 기후변화, 국가안보 등)에 근거한 일방조치에 관한 다자적 공론화가 필요함.
 - 그동안 다자통상 체제에서 무역과 개방이 국가 내 불평등 증가의 주요 요인일 수 있다는 지적에 소극적으로 대응(적극적인 긍정 또는 부정의 부재)해 왔으나, 적극적인 인식의 변화가 요구됨.
 - 다자 차원의 통상협상 논의 진전 부재의 원인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현재 글로벌 경제상황하에서 세계경제에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에 관한 질문은 유효하고 시의적절한 것으로 보임.
 - 무역자유화로 인한 불평등의 현황과 구조적 원인을 식별하고, 문제의 본질을 다루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
 - ※ 선진국과 개도국 간 불평등, 상대적 소외 계층(미소중소기업, 여성) 등 이슈는 논의 지속
 - 최근 통상협정 논의에서 노동, 환경 이슈가 부상한 배경을 생각해볼 필요(예시: 미국 주도 USMCA, IPEF 등)
 - 무역으로 인한 불평등 이슈를 의제로서 수용하고, 파생된 비용의 최소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무역의 이익을 확대하기 위한 논의도 모멘텀을 상실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됨.
 - 무역과 불평등 관련 각국의 정책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개도국의 발전 단계별 정책방향을 제안하는 방안도 고려 가능
 -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비무역가치 등에 대해 국제기구, 싱크탱크, 기업, 시민단체, 정책담당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포괄하는 다자 채널·플랫폼을 고려할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일방조치의 유형화와 파급효과에 관한 공동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다자적 합의안 도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 일례로 '22년 6월에 출범한 OECD 탄소저감접근에 대한 포괄적 포럼(IFCMA)은 각국이 시행하고 있는 기후완화정책의 유형화·매핑, 유형별 효과성 평가를 통해 정책별 배출감축 효과의 수치화·DB화 작업을 목표로 함.
 - 가격기반(price-based) 기후완화정책뿐 아니라 비(非)가격기반 기후완화정책까지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IFCMA의 성공은 가격기반 기후완화정책에 대해서만 호환가능성을 인정하는 기후 관련 일방조치(예: EU CBAM)와 관련하여 국제사회 차원의 후속 논의에도 시사하는 바가 큼.

나. 한국에 대한 시사점

- 글로벌 무역 및 투자를 재활성화하기 위해 경제적 위상을 고려한 선진통상 국가로서 한국의 입장에서 국제사회에 던질 수 있는 다양한 내러티브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은 '무역의 확대를 통한 성장'의 사례로서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혜택이 다수에 공유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글로벌 무역 및 투자를 재활성화하기 위해 국제사회에 던질 수 있는 다양한 메시지를 보유하고 있음.
 - 수출과 성장 일변도의 과거지향적 내러티브에서 벗어나 지속발전 가능성, 포용성 등에 대한 현재 국제사회의 고민에 보다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음.

- 디지털, 노동, 환경 등 신통상 이슈와 관련된 통상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우리의 경제적 위상과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 규제협력과 더불어 교역상대국의 정책 수요인 기술협력, 인프라 협력, 인력교류 협력 등을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실질적인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무역과 투자 정책 및 공적개발원조(ODA) 정책의 시너지 확대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미국과 EU는 무역기술위원회(TTC) 워킹그룹을 통해서 무역과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식별하고 공급망, 기술, 인력 교류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호주, 선진국에서는 디지털 경제동반자협정(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그린경제협정(Green Economy Agreement) 등 경제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협력을 약속하는 추세임.
 - 미국-EU TTC나 디지털·그린 경제협정을 참고하되, 한국 실정에 맞는 무역과 투자 협력 모델을 개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공급망·디지털·기후변화에 맞춘 ODA 사업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가 가능하며, 무역과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의 효과를 높인다는 차원에서 통상정책과 ODA 정책 간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대내적으로 경제성장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서비스 수출 확대를 포괄하는 방안을 지속하여 모색하되, 무역자유화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에 노출된 피해 계층·그룹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내 보완대책 준비를 병행함으로써 사회 전반에서 무역 개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함.
 - 무역과 개방을 통해 성장한 한국은 상대적으로 낮고 안정적인 소득 불평등도를 달성하면서 개방정책의 지속성 유지가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한국도 2000년대 중반 이후 신흥경제권과의 무역자유화 협상을 진행하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수출을 촉진해왔으나, 그와 동시에 근로자간 소득과 고용안정성에 변화가 나타나는 점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 무역 개방에 따른 경제의 조정과정에서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무역조정지원제도, 고용보험제도 등)하는 것은 무역의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조치이며, 근로자에 대한 무역조정지원 체계 고도화, 기업과 근로자의 경쟁력 제고방안 등을 함께 고려하여 국내 보완대책을 지속해나가야 함(구경현 외 2022, 발간예정)
 - 과거 제조업 생산 네트워크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제조업의 서비스화와 환경 상품·서비스 교역으로 생산 네트워크의 전환이 강조·진행되고 있으므로(김현수 외 2021, 이주관 외 2022, 발간예정), 산업경쟁력 강화 측면의 정책과 함께 재분배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 앞으로 디지털 서비스 등 분야의 개방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엄밀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 및 디지털 분야의 데이터 구축과 분석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임(김종덕 외 2022, 발간예정; 이규엽 외 2021, 2022, 발간예정). **KIEP**

참고문헌

- 구경현, 김혁황. 2020. 『무역구조의 변화가 국내 고용구조에 미친 영향과 시사점』, 연구보고서 20-1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구경현, 배찬권, 박혜리, 류기락. 2022. 『포용적 무역을 위한 국내보완대책의 성과와 시사점』, 연구보고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발간예정).
- 김종덕, 조문희, 김현수, 강준구, 김혁황. 2022. 『한국의 서비스무역 통계 개선 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발간예정).
- 김현수, 강준구, 금혜윤, 정재욱. 2021. 『제조업 서비스화의 수출경쟁력 제고 효과 연구』, 연구보고서 21-3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규엽, 최원석, 박지현, 엄준현, 강민지, 황운중. 2021. 『디지털 전환 시대의 디지털 통상정책 연구』, 연구보고서 21-0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규엽, 최원석, 이천기, 엄준현, 황운중. 2022. 『디지털 무역협정 전략 로드맵 연구』, 연구보고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발간예정).
- 이주관, 조문희, 강준구, 김지현. 2022. 『글로벌 환경 상품서비스 시장개방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 시사점』, 연구보고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발간예정).
- 조문희, 배찬권, 이규엽, 강준구, 김지현. 2020. 『일방적 통상정책의 국제적 확산과 무역구조의 변화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20-2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안성배. 2022. 「2023년 세계경제 전망」. *오늘의 세계경제*, Vol. 22. No. 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황운중, 이수영, 김혁황, 강영호. 2017. 『수출이 국내 고용에 미치는 영향』, 연구보고서 17-1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Alvarez, F., F. J. Buera, and R. E. Lucas. 2013. "Idea Flows, Economic Growth, and Trade." Working Paper No. w19667.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Antras, P. and D. Chor. 2022. "Global Value Chains." *Handbook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 5. Elsevier.
- Artuc, E., G. Porto., and B. Rijkers. 2019. "Trading Off the Income Gains and the Inequality Costs of Trade Policy."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120: 1-45.
- Aslam, A., N. Novta, and F. Rodrigues-Bastos. 2017. "Calculating Trade in Value Added." IMF Working Paper, WP/17/178.
- Autor, D. H., D. Dorn, and G. H. Hanson. 2013. "The China Syndrome: Local Labor Market Effects of Import Competition in the United States." *American Economic Review*, 103, 2121-68.
- _____. 2016. "The China Shock: Learning from Labor-Market Adjustment to Large Changes in Trade." *Annual Review of Economics*, 8, 205-240.
- Baldwin, R. 2011. "Trade and Industrialisation After Globalisation's 2nd Unbundling: How Building and Joining a Supply Chain Are Different and Why it Matters." Working Paper No. w17716.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Buera, F.J. and E. Oberfield. 2020. "Global Diffusion of Ideas." *Econometrica*, 88(1): 83-114.
- Caliendo, L. and F. Parro. 2015. "Estimates of the Trade and Welfare Effects of NAFTA." *The Review of Economic Studies*, 82(1): 1-44.
- _____. "Trade and Labor Market Dynamics: General Equilibrium Analysis of the China Trade Shock." *Econometrica*, 87(3): 741-835.

- _____. "Trade Policy." *Handbook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 5. Elsevier.
- Chakraborty, S. K. and Mazzanti, M. 2020. "Energy Intensity and Green Energy Innovation: Checking Heterogeneous Country Effects in the OECD." *Structural Change and Economic Dynamics*, 52(C): 328-343.
- Constantinescu, C. A. Mattoo, and M. Ruta. 2020. "The Global Trade Slowdown: Cyclical or Structural." *The World Bank Economic Review*, 34(1): 121-142.
- Davidson, C., L. Martin, S. Matusz. 1999. "Trade and Search Generated Unemployment."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48(2): 271-299.
- Dolfen, P. L. Einav, P.J. Klenow, and B. Klopach. 2023. "Assessing the Gains from E-Commerce." *American Economic Journal: Macroeconomics*, 15(1): 342-370.
- Donaldson, D. 2015. "The Gains from Market Integration." *Annual Review of Economics*, 7: 619-647.
- Escaith, H. and Miroudot, S. 2015. "World Trade and Income Remain Exposed to Gravity." In Hoekman, B. ed. *The Global Trade Slowdown: A New Normal? VoxEU eBook*. London: CEPR Press and EUI.
- Fajelbaum, P. D., P. Goldberg, P. Kennedy, and A. Khandelwal. 2020. "The Return to Protectionism."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35(1): 1-55.
- Frankel, J.A. and D.H. Romer. 1999. "Does Trade Cause Growth?" *American Economic Review*, 89(3): 379-399.
- Garsous, G. and Worack, S. 2021. "Trade as a Channel for Environmental Technologies Diffusion: The Case of the Wind Turbine Manufacturing Industry." OECD Trade and Environment Working Papers No. 2021/01. Paris: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Handley, K., F. Kamal, and R. Monarch. 2020. "Rising Import Tariffs, Falling Export Growth: When Modern Supply Chains Meet Old-style Protectionism." Working Paper No. w26611.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Heath, R. and A.M. Mobarak. 2015. "Manufacturing Growth and the Lives of Bangladeshi Women."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115: 1-5.
- Hegre, H. J. R. Oneal, and B. Russett. 2010. "Trade Does Promote Peace: New Simultaneous Estimates of the Reciprocal Effects of Trade and Conflict." *Journal of Peace Research*, 47(6).
- Heid, B. and M. Larch. 2016. "Gravity with Unemployment."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101: 70-85.
- Helpman, E., O. Itzhoki, and S. J. Redding. 2010. "Inequality and Unemployment in a global economy." *Econometrica*, 78(4): 1239-1283.
- Hoekman, B. 2015. "The Global Trade Slowdown: A New Normal." CEPR Publication.
- Irwin, D. A. 2019. "Does Trade Reform Promote Economic Growth? A Review of Recent Evidence." PIIE Working Paper No. 19-9. Washington, D.C.: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 Li, Q. and R. Reuveny. 2011. "Does Trade Prevent or Promote Interstate Conflict Initiation." *Journal of Peace Research*, 48(4).
- Martin, P. M. Thoenig, and T. Mayer. 2008. "Make Trade, Not War." *The Review of Economic Studies*, 75: 865-900.

- Melitz, M. J. and D. Trefler. 2012. "Gains from Trade When Firms Matter."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6(2): 91-118.
- OECD. 2020. "OECD Economic Surveys: Korea." Paris: OECD.
- Osnago, A. and S. W. Tan. 2016. "Disaggregating the Impact of the Internet on International Trade."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No. 7785. World Bank Group.
- Panagariya, A. 2019. "Free Trade and Prosperity." Oxford University Press.
- Riker, D. 2014. "Internet Use and Openness to Trade." Office of Economics Working Paper. USITC.
- Robertson, R., D. Kokas, G. Lopez-Acevedo, and D.C. Medeiros. 2022. "Mending the Gap: Apparel Export Prices and the Gender Wage Gap in Bangladesh." CEPR Publication.
- Rodrik, D. 2018. "Is Populism Necessarily Bad Economics?" AEA Papers and Proceedings, 108: 196-199.
- Wang, M., Mao, X., Xing, Y., Lu, J., Song, P., Liu, Z., Guo, Z., Tu, K., and Zusman, E. 2021. "Breaking Down Barriers on PV Trade Will Facilitate Global Carbon Mitigation." *Nature Communications*, 12: 1-16.
- WTO. 2021. "Trade Policy Review: Republic of Korea." WT/TPR/G/414/Rev.1. World Trade Organization.
- _____. 2022. "World Trade Report 2022: Climate Change and International Trade." World Trade Organization.